

“보육시설 이용료 공동부담 제도를”

여성민우회 정책보고서 발간...“국가·자치단체도 한몫해야”

관정숙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방정부와 부모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여성고용확대 사업을 벌이는 등의 새로운 여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7일 민선지방자치체 출범 1돌을 맞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1년간의 여성정책을 평가한 1백20쪽의 보고서를 펴낸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이경숙)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미래 여성정책의 방향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97년까지 보육률 100% 달성 목표를 세우고, 보육아의 60% 이상을 돌보는 민간·가정보육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책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육시설의 민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돼 있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95년 서울시 보육시설은 국·공립이 15.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 보육시설(44.6%) 가정 보육시설(39.7%) 직장 보육시설(0.5%)이다. 또한 서울시가 95년 세운 4백1곳의 보육시설 가운데 27곳(6.7%)만이 운영을 구에서 맡고 있으며, 96,97년 확충 예정인 3백70곳 중에도 구가 운영을 맡을 곳은 6.8%인 25곳에 그친다.

이경숙 상임대표는 “시가 짓고 운영 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아져야 할 뿐 아니라 보육료를 수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도 바뀌어야



지방자치단체와 부모가 보육료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다”면서 보육료를 국가, 지방정부, 부모가 공동부담하고, 법정 저소득층의 범위를 넓혀 면제해주며,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어 보육비를 거두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시 여성의 경우 고졸 이상 비율이 57.9%로 전국 평균 36.7%에 비해 20% 이상이나 높은 등 학력은 엄청나게 앞섰는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종사자 비율이 51.4%로 전국 평균(3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취

업정보 및 알선센터 운영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 고학력 여성 경제참여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정·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27일에는 서울 탑골공원(낮 12시~2시)과 명동성당(오후 3~5시) 앞에서 ‘서울시 발전을 위한 시민 한마디 제안’ 행사를 벌인다.